

# 통일독일의 정치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김 영 국 (서울대 정치학과 명예교수)

## I. 문제의 제기

오늘날 세계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기가 곧 죽음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회생의 길로 접어드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과거의 수 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역사를 창조한 인류의 업적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그 점에서, 위기는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위기를 헤쳐나갈 지혜와 능력에 주목하게 된다. 그것은 현명한 결단을 필요로 한다. 바로 지금 우리가 그러한 시점에 서 있는 것이다. 이른바 냉전 질서가 붕괴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부터 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입장이 다양하게 개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현시점에서 우리의 최대과제가 인위적 분단의 극복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분단을 극복하면서 항상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최근의 변화 가운데 우리의 주목을 끄는 역사적 사건은 역시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의 붕괴로부터 시작되어 1990년 10월 3일 통합조약 발효로 완성된 독일통일이라고 할 것이다. 비록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독일의 통일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점을 배우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 차이가 분명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독일식의 통일방식 및 경로를 그대로 밟을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독일의 경험에 주목하고자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독일의 통일이 무력통일이나 정치적 통일이 아닌 평화적 방식에 의한 통일이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원칙으로 한 통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화와 자유에 기초한 통일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역사논리에 순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일독일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으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 한 마디로 그것은 현시점에서 통일기반의 조성과 관련하여 남북한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신뢰구축 그리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적 안목의 준비작업을 추진해 온 독일의 경험은 역시 충분한 검토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최근의 예멘사태에서 보듯이 상이한 이념과 체제에 의해 형성된 異質의 사회와 가치관을 정치적 결정에 의한 외형적 통일만으로 극복할 수는 없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다만, 통일前의 서독이 비교적 착실한 준비를 했다는 그간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통일독일이 현실적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독일의 경험이 안고 있는 문제점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1)</sup>

분명한 사실은 이상의 교훈을 통해 민족통합과 동질성회복을 위한 대비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의 수립이 될 것이다. 그 점에 대해 제2차대전후의 독일의 경험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정치교육의 정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매우 설득력 있게 시사해 준다. 대체로 정치교육에 대한 연구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관련하여 민주시민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냉전질서의 해체에 따른 최근의 변화는 이제 우리의 정치교육도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민족통합과 동질성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통일준비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말한다. 본 연구가 통일을 전후한 독일의 정치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이다.

통일에 대비한 정치교육의 재정립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일독일의 정치교육의 이념과 목표 그리고 실행에 초점을 맞추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

1) P. Pulzer, *German Politics 1945-199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p. 3-22; 독일통일의 최대과제를 동서독인들 사이의 마음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분석한 연구로는 M. Minkenberg, "The Wall after the Wall," *Comparative Politics*, 43 (October 1993), pp. 53-68을 참조.

첫째, 연구의 주제인 정치교육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하여 정치와 교육의 관계, 정치교육의 필요성과 개념, 독일의 정치교육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통일이전의 서독에서의 정치교육은 어떤 목표와 이념아래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었는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통일이후의 후유증과 동서독 주민간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통일독일이 어떻게 정치교육을 재정립하고 있으며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넷째,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통일에 대비한 정치교육의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 II. 정치교육의 문제와 개념

### 1. 정치와 교육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현재보다 나은 사회를 모색하며 살아왔다. 政治도 따지고 보면 보다 좋은 사회에 대한 構圖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기준을 우리는 흔히 사회정의로 나타내곤 한다. 오늘날 사회정의가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함은 거의 일반화되다시피 했다. 물론, 과거에도 정의론이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은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과거에도 정치체제는 그것에 토대를 두고 나름대로 존재했다. 우리가 과거의 정치체제에 대한 평가에 결코 인색해서는 안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들이 이해하는 한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똑같이 좋은 사회를 추구했으면서도 막상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아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에 있다. 결국, 좋은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좋은 질서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부터 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무엇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이해는 도덕적 판단이 요구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 교육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정치체제는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좋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주입시킴으로써 그만큼

자신의 도덕적 기반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정치의 목적을 행복에 두곤 한다. 그리고 행복은 덕의 완전한 실천과 구체화에 있다고 본다. 인간의 잠재적 덕성을 개발함으로써 행복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교육의 목적이 완전하고 발전된 자아의 실현에 있다는 점에서 정치와 교육은 그 목적상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2. 정치교육의 필요성과 개념

교육과 정치구조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찍이 플라톤은 미래의 지도자들의 올바른 시각과 정신적 틀을 구축하고 지도자감으로 부적합한 사람들을 추려내기 위해 교육체도를 고안해 냈다. 그것은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교육은 바로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반구성원들의 현실인식을 유도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 점에서, 플라톤의 정치교육론은 자신이 직면한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지도자를 등장시키기 위해 적합한 형태의 정치교육이 필요함을 지적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sup>2)</sup>. 한편, 교육은 전통적으로 새로운 세대에게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간직해 온 고유의 모습을 계승하는 데도 기여해 왔다. 교육이 공동체의 결속과 지속성을 증진시킨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렇게 본다면, 교육은 분명히 보수주의적이며 현상유지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교육은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며 변혁에 대항하는 해석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인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sup>3)</sup>. 여기서 우리는 정치구조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확인하게 된다.

민주국가에서 정치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사회를 민주화하고 인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교육의 실시는 인간이 구성한 사회구조에 있어서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규명해 내고 민주주의체제

2) R. M. Hare, *PLATO*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pp. 47-51.

3) R. Barker, *Political Legitimacy and the State* (Oxford: Clarendon Press, 1990), pp. 149-150.

의 확립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은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정치교육을 통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의 제조건을 이해하고 사회의 지속적 변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을 습득하게 된다. 민주주의의 실현가능성이 주권자로서의 시민 각자의 자제력과 그 습관화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결정적 역할이 다시 한번 확인됨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민주시민교육은 자율적 인격체를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그런 맥락에서의 정치교육은 비판적 합리적 계몽으로 정의될 수 있고 정치교육의 과제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 의식과 지식 그리고 능력을 전달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정치교육이 개인을 사회전체와의 연관 속에서 인식하고, 어떠한 갈등이나 대립도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심리학적 차원에서 판단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을 지닌다<sup>4)</sup>.

### 3. 독일의 정치교육

전후 독일에 있어서 정치교육은 대체로 자주적 사고에 기초하여 실천하는 성숙한 인간의 육성과정을 의미한다<sup>5)</sup>. 빌헬름 2세(Kaiser Wilhelm II)하의 정치교육이 실시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정치교육은 독일정치문화의 필수요소를 구성하여 왔다. 그러기에 통일독일의 정치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독일인의 내적 통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치교육은 민주화를 위한 정치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능력의 공유를 과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정치교육은 독일연방공화국의 국가와 사회질서의 기본원칙(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과 권력분립, 기본권과 법치국가 등)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이처럼 정치교육은 독일기본법의 헌법적 질서의 이념과 가치가 제도와 상호작용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정치과정에서 제도와 가치와의 상호작용을 논의한다. 그러나, 민주제도와 과정의 기능방법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적극적 시민이 되는데 불충분하므로 각 개인의 생각을 통해

4) R. Schmiederer, *Zur Kritik der Politischen Bildung*, Frankfurt am Main, Köln: Europaeische Verlagsanstalt, 6. Aufl. 1977, pp. 38-9.

5) N. Schausberger, *Politische Bildung als Erziehung zur Demokratie*, Jugend und Volk, Wien Muenchen, 1970, p. 42.

현실적인 정치, 사회문제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고양시키고 공동으로 공공생활을 구성함에 있어서 사회와 정치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점에서, 정치교육은 개인이 정치, 사회문제들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민주적 정치체제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자유의 실행과 증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형태의 정치적 행동으로 이해할 경우, 우리는 민주주의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춘 정치적 행동에 기초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어느 국가에서나 동일한 형태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의 민주주의가 다른 것처럼 독일적 맥락에서 민주주의도 독일의 전통적 정치문화가 국가와 사회질서에 상호 연관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특수한 형태로 표출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독일은 자발적 저축체계에 기초해 정치적 민주주의를 구축한 영국과 달리 상대적 후진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국가를 필요로 했고, 그 결과 독일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순조롭게 국가형태로 실천에 옮겨지기는 어려웠다. 근대화의 여정 속에서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독일은 결코 순탄치 못했다<sup>6)</sup>. 예컨대, 1871년 독일제국의 성립은 민주적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에 국가의 개념과 민주주의는 일치할 수 없었다. 국가와 관료주의는 초당적이고 통일된 권능으로서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해 왔다. 반면에 의회는 이해가 상충되는 장소로 인식됨으로써 민주주의 정치문화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러한 현상은 가속화되어 바이마르 공화국에 있어서도 1928년 이후 연방의회 하원의 불안정성이 만성화되었다. 특히 히틀러의 등장인 있기 2년 전부터는 의회가 완전히 마비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자기규제의 메카니즘으로서 권력의 인격화라는 권력집중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 인격화는 합리적 권력이라고 하는 자유주의적 개념과는 대립되는 카리스마적 권력 개념에로의 퇴행을 의미했다. 그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상황에서 정치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이념을 이해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더욱이, 나치즘에 기초한 독재체제 수립 이후에는 민주적인 정치교육 자체가 불가능하였다는 점

6) G. A. C. Janos, *Politics and Paradigm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6), pp. 58-64.

에서 민주시민의 육성을 위한 독일의 정치교육은 1945년 이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전후의 정치교육의 기본틀과 실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 구조적 맥락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 Ⅲ. 통일이전 서독의 정치교육 (1945-1990)

#### 1. 전후 정치교육의 이념과 목표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면서 독일이 또다시 적대적 군사대국으로 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이 제안한 정책적 대안은 독일에 대한 정치재교육(political re-education)이었다. 사실상 영국의 대안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의 기본목표는 권위주의적이고 군사적인 독일정치체제의 기반이었던 이념과 이상을 제거하는데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영국의 철학적, 정치적 이념으로 대체시키고자 했다. 그 결과, 독일인들은 '법의 지배'를 준수하고 헤겔적 의미의 관념론 대신에 실용주의, 국가주의 대신에 입헌주의를 수용하도록 재교육받게 되었다. 당시 연합국측의 단기적, 장기적 계획과 목표는 포츠담에서 이른바 4D's로 묘사된 탈군사화(De-militarization), 탈나치화(De-nazification), 민주화(Democratization),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를 통해 구체화되어 갔다. 그러한 정책기조를 고려해 볼 때, 당시 독일연방공화국의 정치교육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도 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의 정치교육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분단 후에 서독지역에서 장래의 정치교육을 위한 미국식의 재교육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정부형태로서 뿐만 아니라 생활양식으로 이해되도록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독일에서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정치교육은 1946년초 헤센(Hessen)주에서 시작되었다. 州헌법 제56조에 의하면, "교육의 목표는 젊은 사람을 도덕적인 인격자로 길러 국민과 인류에게 --- 자주적이고 책임있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그가 직업적 능력과 정치적 책임을 갖출 수 있도록 육성하는데” 있다. 바로 이 조항이 전후 독일에 있어서 정치교육의 기본정신을 이루어 왔던 것이다<sup>7)</sup>.

1950년대에는 정치교육의 논의에서 이른바 “동반자교육”이 채택되어 이를 토대로 정치교육을 강화하였다. 그 논리에 따르면, 정치교육은 민주주의가 기능을 발휘하여 독일인들을 장래에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선도하며 시민들을 단결심과 협동정신으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F. Oetinger의 이론은 부분적으로 신랄한 비판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리트(T. Litt)는 동반자교육이 “국가에 대한 교육”을 등한시한다는 비판과 함께 국가가 유일한 평화보장기구 그리고 현대사회의 한 중요한 요소로서 정치투쟁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논리는 새연방공화국의 새민주적인 국가와 사회질서로서의 시민통합을 위한다는 공통점을 지닌 것이었다. 정치교육의 목적은 기초적인 기본이해를 정치적인 것과 연관시켜 의식하도록 하여 그것을 미래의 정치적 의사와 여론형성의 기준으로 삼고 또한 시민의 정치적, 이성적 행동의 원칙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두었다. 1949년 기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독일연방공화국은 독일의 다른 부분과의 연결을 통해 보충되는 중심국가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독일국민이 자결권에 의해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완수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sup>8)</sup>. 이처럼 50년대 정치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확신시킴으로써 기존의 극단주의적이고 일방적인 정치적 해결만을 일삼아 온 독일의 정치형태와 국민복종의식을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것은 서독사람들이 연방공화국을 창립할 때 안정적인 민주주의 전통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70년대 초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1968년에 학생폭동이 일어나자 국내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 논쟁이 재연되었고 극단주의 현상이 나타났다. 학생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그 시기를 당시 「독일사회주의학생동맹」은 혁명상

7) Hans Krollmann, "Politische Unterricht in Hessen seit 1945," in *Politische Bildung in den achtziger Jahren, Deutsche Vereinigung für politische Bildung*, Stuttgart: J.B. Metzler, 1983, p. 14.

8) G. Rütger, "Bedeutung und Stellenwert der politischen Bildung in Deutschland Vor u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International Comparison of Civic Education and Korean Response*, in International Seminar on Civic Education, 1994, pp. 207-208.



황의 국면으로 규정하고, 혁명을 위한 투쟁조직건설에 박차를 가했던 것이다. 그들의 운동논리는 주로 제국주의론과 신무정부주의였다. 그러나, 그 논리들은 경험에 의해 지지된 사실판단과 거의 상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념적 경직화의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sup>9)</sup>. 그러한 논쟁기에 독일의 정치교육은 선입견을 배제한 판단력 형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목적을 설정하고 있었다. 더욱이 70년대 초기 이후 통일정책의 전환은 정치교육에 영향을 주게 된다. 1969년 이래로 內獨省으로 불리는 종전의 전독일문제 담당부처는 동독으로의 수학여행과 연수 등 독일통일정책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출판물과 교재에서 60년대 중반까지 주류를 이루었던 반공주의의 목소리 대신 적당한 거리를 둔 표현방법을 쓰기 시작했다<sup>10)</sup>.

1945년 이후 서독의 정치교육은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실현을 보장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 왔다. 이를 위해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체제의 정당성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다. 특히, 정치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확한 현실판단능력과 실천능력을 함양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자기실현을 보장하려는 교육목적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 2. 70년대 중반 이후의 정치교육

정치교육에서 국가의 주요과제는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그리고 과거의 가치관, 학문적 토론으로부터 합의가 가능한 교육의 목표 및 내용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정당, 부모 또는 모든 해당자 중 ‘누구로부터 합의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앞에서의 1960년대말 정치교육에 대한 논쟁 이후 1970년대 초에는 최소한의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합의를 도출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들이 고려되었다: (1)정치교육에서는 과연 관여자 형태, 정치적 행동 또는 합리적 판단능력 중 어느 것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가? (2)정치교육이란 과연 헌법의 기본가치와의 일치 또는

9) 김영국, 『민주화와 학생운동의 방향』(서울: 대왕사, 1991), pp. 149-155.

10) G. Rütger, "Politische Bildung und Wiedervereinigung," 「민주평통」200호 기념 정책포럼, 1995, p. 40.

정치적 동화에 관한 것인가? (3)정치교육은 무엇보다도 우선 민주화 또는 정치 참여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4)정치교육은 단지 정치행동을 위한 이론적 준비인가 아니면 이미 학교수업에 정치행동을 포함시켜야 하는가? (5)정치는 우선적으로 질서확립의 과제로서 이해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해방의 원칙으로 이해되어야 하는가?

7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나타난 실용주의로의 전회는 정치교육의 새로운 기본원칙을 탄생시켰다. 1977년에 보이텔스바헤르 합의(Beutelsbacher Konsens)에서 다음과 같은 정치교육의 3가지 기본원칙을 확립하였다. (1)정치교육은 어떤 수단으로든지 학생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어느 한 쪽으로 유도해서는 안되며 자유로운 가치판단을 저지해서도 안된다. 여기에 정치교육과 정치주입교육의 경계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주입은 정치교육의 원칙에 어긋난다. (2)학문이나 정치에 있어서 논쟁거리가 되는 것은 학교수업시간에도 논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만약 다양한 입장이 학생들에게 제시되지 않고 그로 인해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그것은 이미 정치교육이 아니라 세뇌교육이다. 반면에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교실에서 소개되었을 때 교사 자신의 개인적 입장은 정치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3)정치교육은 학생들 자신이 처한 정치적 상황과 자신들의 요구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또한 자신들의 이익에 맞추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상의 3가지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2시간의 정치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sup>11)</sup>.

그 원칙에 의하면, 정치교육은 정치-사회적 현상을 이해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지 그같은 현상을 형성하려고 하거나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과거 민주주의체제의 실패로 인한 자신들의 뼈아픈 경험과 그로 인한 심리적 부담 때문에 독일국민들에게 있어서 정치교육은 특별한 역할과 의미를 갖는다. 그러기에, 독일의 정치교육은 무엇보다도 독일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그들에게 당연하게 보장되어 있는 권리와 의무 그리고 가능성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쟁취해야 하는 과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요컨대,

11) Hans-Werner Kuhn / Peter Massing (Hg.), *Politische Bildung in Deutschland. Entwicklung-Stand-Perspektiven*, Opladen 1990, pp. 289-303.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은 정치현실과 그 속에 존재하는 여러 입장들에 대해 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정치교육의 실현가능한 목표는 먼저 국가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명확한 가치관 확립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오늘날 독일의 청소년들은 분단을 경험하지 않았고 개인적 고통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문제에 대한 총체적 책임은 당연히 국가와 사회에 귀속된다. 따라서 민족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의식과 평화와 자유 하에서의 자결권을 계속 일깨우는 것은 학교의 과제로 기본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중반부터 서독사회에서 독일문제를 의식화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졌다. 서독에서는 민족의 국가적 통일이 곧 실현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또한 대부분의 연방주민은 동독인들이 실존 사회주의사회에 적응함으로써 대부분의 서독인들과 마찬가지로 통일을 염원하고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진 것이었는가를 분명히 확인하고 있다<sup>12)</sup>. 더우기 1980년대 중반이래 정치교육에 있어서 토대가 되는 새로운 구상들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당시까지의 정치교육의 기초를 전제로 새로운 학설을 이론적으로 관통하는 작업에 모든 노력이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체제의 존립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焦眉의 문제들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독일문제의 유럽화라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왔으며 그에 따라 독일문제 교육지침은 서독의 독일정책이 유럽의 평화정책과 같은 맥락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교육지침은 나치즘의 붕괴와 더불어 독일의 분단이 시작되었지만 서독의 독일정책이 나치즘과는 달리 자유와 평화에 의한 통일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체제비교와 인권문제를 강조하는 한편 민족적 유대감 강화와 통일 의식의 고취를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상호이해의 기틀을 다져 나갔다. 또한 그런 흐름 속에서 80년대 말에 정치교육의 핵심내용은 새롭게 변화해 갔다. 다원화(Pluralisierung)의 단계로 구분되는 80년대 중반이후의 정치교육에서는 대상과 방법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것은 예컨대

12) G. Rütger, 1995, pp. 41-42.

수업방식에 있어서 단지 주어진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 아니면 정치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선택, 비중, 논증을 먼저 다루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였다. 그리고 정치교육에 있어서 전문교육법과 전문학문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 및 분석의 필요성과 함께 교육심리학의 전제와 인지적 및 도덕적 발달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와 활용방안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던 것이다. 특히 1980년대말 공산주의의 붕괴와 유럽분할의 종식에 따른 새로운 세계질서의 모색은 정치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개혁과 변화를 야기시킴으로써 이러한 새로운 정치교육의 요구를 더욱 확대시켜 왔다<sup>13)</sup>.

### 3. 통일이전의 정치교육실태

독일의 정치교육은 학교와 학교외의 부문에 걸쳐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은 지방정부의 책임아래 놓여 있다. 민주시민의 육성과 국민통합을 모색하는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을 통해 강조된 것은 시민의 정치적 의식형성을 위한 원칙이었다. 그리고 학교수업을 위해 1960년대말 이래 교재개발 및 교사양성이 추진되었으며 독일 통일정책에 관한 출판물이나 세미나 자료들이 각급 학교에 제공되었다. 정규학교기관에서의 정치교육의 제1단계는 4년과정으로 되어 있는 초등학교(Grundschule)에서 담당하고 있다. 정치사회화의 담당기구인 초등학교에서는 정치문화형성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법, 학습내용 등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학생들의 사회적 학습에 주목함으로써 정체성, 협동성, 단결, 비판력 등의 교육목표를 실현하고자 했다. 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정치교육에서 정치적 학습개념이 사회적 학습개념으로 전환되었으며 정치교육에 관한 논의도 교수방법론에서 평화교육 및 환경보호 등으로 이행되었다. 4년과정을 이수하면 2년간의 공동교육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기간은 상급학교선택을 위한 예비기로서 4년과정 이수자중 약 3분의1만이 중등과정의 주요학교(Hauptschule)로 진학하게 된다. 1968년에 건립된 주요학교에서는 노동론이나 직업교육론 등의 교과목을 신설도입함으로써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이원화를 극복하였다. 이러한 개설과목으로 인해 정치교육시간이 다소 축소된 것을 역사 및 독일어 등의 교과목을 통해 보완하였으며 그것은 상당한 정도의

13) G. Rütger, 1994, pp. 210-212.

교육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주요학교의 정치교육은 그 내용과 방법에 서 지식중심의 학문적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정치경제학적 사고력의 함양을 위해 학문적 결정성의 원칙을 정치교육에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은 정치사회 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실생활의 경험과는 거리가 먼 객관적 분석에 치중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교육방향에 대한 비판은 가치배제적이 아닌 가치지향적, 현실참여적 자세를 촉구하고 있었다. 학생들로 하여금 현실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일체감, 연대감, 참여의식 등을 고양시키는 효과를 거둔다. 이를 위한 교수방법으로는 구체적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와 토론을 주로 하는 대화방법이 채택되고 있다.

또 다른 유형으로 주요학교, 실과학교(Realschule), 김나지움(문과고등학교)의 형태를 혼합한 종합학교(Gesamtschule)를 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능력에 따라 적합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직업교육이 교과과정에 포함된다. 종합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은 정치적 참여에 필요한 정치적 판단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정치교육의 목적을 학생들의 선입견 분석과 사회비판 및 참여의식을 함양하는데 두고 있다. 그에 따라 교과과정도 개편되어 사회교과목의 경우 다른 정치교육 담당과목보다도 중심적인 과목이 되었다. 정치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역사와 지리,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토대로 정확한 현실인식과 비판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그것은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이행해야 할 정치적 의무를 포함한 각종 의무를 인식시킴으로써 민주시민사회형성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그 밖에도 일찌기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정치교육이 실시되었던 학교 유형으로 직업학교(Berufsschule)를 들 수 있다. 직업학교에서는 단순히 직업능력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직업과 연관된 각 분야에 대한 정확한 판단능력을 보유하도록 능력을 길러주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직업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은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구성원 상호간의 인정과 존중 그리고 책임의식을 느끼도록 한다<sup>14)</sup>.

학교 외의 부문에서의 정치교육은 연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다. 이것은 연

14) W. Mickel/D. Zitzlaff(Hrsg.), *Handbuch zur politischen Bildung*, Bonn 1988, pp. 412-424.

방내무성 업무관할에 속해 있는 정치교육연방센터가 맡고 있다. 이 연방센터(본부)는 과거 수십년 동안 연방공화국에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1963년 연방 내무성장관 관장아래 연방정치교육센터로 발족한 이 기구는 정치교육의 실시를 통해 독일국민의 정치적 이해증진과 정치적 견해확립 그리고 자발적 정치참여의 증대를 기본임무로 하고 있다. 그에 따라 1968년 이후에는 정치교육의 목적을 정치현실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 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치적 문제의식과 정치적 판단력을 스스로 함양하도록 지도한다. 연방정치교육센터는 정치교육에 관련된 학교영역에서 각 연방주의 해당관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추진한다. 이 기구는 조직상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집행부에 의해 관리된다. 이들은 내무성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장관은 이 집행부 위원들의 직무상의 의장이 된다. 합의제로 운영하는 집행부는 정치교육 계획, 예산편성, 인사문제 및 정치적 주요사항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연방정치교육센터의 활동에 대해서는 각 당 대표자로 구성된 국회의원들이 감독을 한다. 따라서 집행부는 매년예산을 포함하여 중요한 계획에 대해 의회감독단에 통보할 의무를 지닌다.

연방교육센터의 교육대상은 모든 시민과 정치교육 종사자들로 대별된다. 교육형식과 내용은 정치적 관심도, 민주질서의식 수준 등에 따른 다양한 대상자에 적합하도록 구성된다. 그에 따라 연방정치교육센터는 정치교육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방송시설을 활용해 자체생산물을 홍보하는 적극적 입장을 견지한다. 또한 연방정치교육센터는 교회, 노동조합, 정당산하 재단 등의 정치교육담당자들에게 재정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정책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치교육과 관련하여 이들은 연방정부로부터의 자치권 존중하에 권장되고 지원을 받아 왔다. 정치교육은 교육기관이 기본법에 기초한 질서의 범위안에서 교육을 시켜야한다는 조건하에 권장되었다. 사설 정치교육기관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다원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은 조직과 법인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사단법인체, 협회, 아카데미재단과 기타 여러 가지의 정치적 목표를 갖는 정당산하 재단 등이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정당산하 재단들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정당은 정

당법에 명시된 대로 시민들의 정치활동을 고무하고 국민과 국가간의 결합을 촉진해야 할 정치교육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산하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사회민주당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기독교민주당의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기독교사회당의 한스 자이델 재단, 자유민주당의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등이 그것이다. 이 재단들은 정치적 프로그램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 및 정치참여의 고양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 IV. 통일독일의 정치교육(1990- )

##### 1. 동독의 부정적 유산

통일이전 서독정치교육의 중심과제는 독일인들의 공동소속감을 상기시켜 주고 통일을 위한 정신적 유대를 공고화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1969년 이래 내독관계성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정치교육을 추진하였다. 학문적인 출판물과 교육자료를 제작하였으며 통독프로그램과 접경지대로의 여행 및 동독에의 견학여행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정치교육은 70년대 중반이래 독일통일문제를 서독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자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동, 서독을 막론하고 수 년내 국가적 통일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당시의 지배적 분위기였다.

그러나, 1989년 11월 9일 「동독의 국경개방」이라고 불리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냉전질서하의 현상유지론적 독일연구 영향의 맥락에서 시행된 정치교육이 동독인들의 관심사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역사적 사건의 파장은 독일은 물론이고 유럽전체의 대변혁을 초래했다. 그와 같은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고 그 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국가건설의 과정을 위해서는 치밀하고 장기적인 정치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한 시대의 획을 긋는 중요한 역사과정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다. 독일의 통일도 결코 예외일 수 없으며, 따라서 통독 초기과정의 혼란은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체로 공감한다. 문제는 혼란의 원인을 찾아내서 어

떻게 처방하느냐에 있는 것이다. 대체로 혼란의 원인을 분단 40년에서 비롯된 동서독인들의 이질성으로 파악함으로써 통일 전의 서독시민들과 동독시민들 간의 적대관계 해소가 수습대안으로 제시된다. 그것은 정치교육을 통한 동서독사회의 재결합을 모색하는 작업으로 구체화된다. 요컨대, 오늘날 통일독일의 정치교육은 무엇보다도 '마음의 벽'을 제거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루어내고자 한다<sup>15)</sup>. 바야흐로 통일독일은 통일 후의 갈등과 이질성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통일된 독일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주민통합문제일 것으로 대부분 관측한다. 상대방을 '한심한 오시'(Ossi, 동독인)와 '속물근성의 베시'(Wessi, 서독인)로 비방하는 동족간의 심리적 갈등은 분단상황에서 살아오면서 축적된 서로 다른 경험과 생활양식 및 가치관에 따라 통일 후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단기간만큼이나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sup>16)</sup>.

이질성 해소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동독지역에서 40여년간 계속되어 왔던 공산주의의 교화로부터 파생된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다. 동독 사회주의통일당(SED)의 정치교육이 남긴 중요한 심리적 폐해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 얼굴'을 가지게끔 교육시켰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여럿이 함께 있을 경우에 하는 말과 친구들과 있을 때 하는 말은 판이하게 달랐다. 거의 모든 동독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구조적 분열증의 고통 속에서 시달려야 했다. 공공생활에서는 광장에서 공허한 구호를 외치며 정치의식을 거행하였으나, 사생활로 돌아오면 밀실에서 텔레비전 앞에 쪼그리고 앉는 이중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발전은 정치교육을 위해 부정적 결과를 낳았다. 강요된 정치의식에 대한 반감은 모든 사회조직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다. 밀실로의

15) 동서독지역의 균형발전과 동서독시민들간의 이질감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할 경우, 진정한 통일은 여전히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동아일보 94년 11월 10일자, 6면). 이와 관련하여 동서독간의 마음의 벽을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동서독간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개인이든 단체이든 모든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 속에서 정신적 통일을 모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시된 바 있다 ( Hans Joachim Maaz, *Das gestuerzte Volk*, Berlin: Argon Verlag, 1991, p. 130).

16) 전경수, 서병철, 『통일사회의 재편과정』(서울대학교, 1995), pp. 63-70참조.



도피는 복잡한 문제들을 대화를 통해 풀려는 노력이 애당초 생겨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러기에, 아직도 새 연방주(동독)에서는 정치교육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들은 강압적인 동독시민교육의 경험에 비추어 정치교육을 정치교화의 도구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독이 남긴 또다른 폐해는 전 동독엘리트가 사회주의로 의식화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10만명 이상의 교사들이 정신을 압살시키는 마르크스-레닌주의 교육의 판문을 통과했다. 그들에게 이러한 사회주의 유산을 철학적으로 반성해 볼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기본법조문이나 연방독일교과서 따위를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부정적 유산을 청산할 수 없다<sup>17)</sup>.

## 2. 통일이후 정치교육

독일통일 이후의 정치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분단으로 인한 정치와 역사의 의식격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독의 교사들은 재교육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그들이 반파시즘적 국가인 동독에 대해 갖고 있는 개념이 수많은 학생세대에 끼칠 영향을 가능한 한 방지하기 위함이다.

동독은 이미 1940년대말에 나치과거를 청산하고 나치독재가 초래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서독에 전가하려고 했다. SED가 국수주의를 파시즘과 동일시함으로써 반파시즘을 자기 정당화의 수단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다. 동시에 동독은 나치의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던 것이다. 울브리히트(Ulbricht)는 이러한 방법으로 공산주의자와 나치주의자, 히틀러와 스탈린간의 협력활동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려 했다. 스탈린주의와 국수주의적 독재정권은 유사한 통치수단을 사용했던 바, 울브리히트는 이념적 근거에서 나치독일과 아테나워 정부를 연관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오류들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독일의 내적 통일에 장기간의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나치독일에 관한 연구가 소홀히 취급될 위험성과 독일인의 정치적 사고에 있어서 반파시즘을 표방하는 SED에 대한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17) Hans-Werner Kuhn/Peter Massing/Werner Skuhr (Hg.), *Politische Bildung in Deutschland. Entwicklung-Stand-Perspektiven*, Opladen 1993, pp. 405-407.

통일독일의 주민의식과 민주정치문화의 형성 및 발전을 위해서는 국수주의적 독재와 공산주의적 독재가 모든 독일인의 머리 속에 기억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기억되살리기 작업은 SED국가에서 무비판적으로 지도급의 위치에서 활동하여 불법을 정당화한 모든 사람들을 거부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정치교육의 목표는 역사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역사연구를 통해 정치적 평가능력과 책임의식 그리고 성숙한 정치적 태도를 육성하려는 데에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향후의 전체주의적 유혹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독재적 무력통치의 차이를 분명히 구별하는 것이다<sup>18)</sup>.

역사인식의 재정립을 위한 동독지역에서의 정치교육은 중요한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정치교육은 연방공화국의 연방주의적 체계를 이용하여 지역적으로 상이한 주장들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분단에서 비롯된 동서독 정치문화의 대립적 이질화의 결과 정신적 공통분모가 사라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치교육은 상호오해와 불신의 골이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급속한 통일이 동독에 자생적, 민주주의적 정치문화가 생성되는 것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교육은 공적 의사소통의 담지자가 생겨나도록 해야 한다. 그 점에서, 동독지역에서의 정치교육은 실천적 민주주의의 행사로서 이루어져야 한다<sup>19)</sup>. 그것은 정치교육과 민주주의가 존속형태와 방법에 있어서 상호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교육이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교육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반대로 민주주의가 실패하면 정치교육도 실패한다. 즉, 민주주의가 정치교육을 가능케 하는 셈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민주주의는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국가에 대항하여 자신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통치제도임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정치교육의 과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3. 통일이후의 정치교육실태

사회통합을 위한 동서독간의 교육통합은 서독교육제도가 동독지역에 도입,

18) G. Rütger, 1995, pp. 44-52.

19) Hans-Werner Kuhn/Peter Massing/Werner Skuhr (Hg.), 1993, pp. 410-414.

적용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는 동독의 학제변경을 들 수 있다. 동독지역의 초등, 중등교육과정은 학생 스스로 탐구하는 창조적인 교수 및 학습의 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통일 이전의 동독의 교육체제는 정치체제의 성격상 획일성과 경직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앞에서 검토한 부정적 유산을 해소하기 위해 동독지역의 교육재편은 불가피하였다. 그것은 교육영역의 분권화, 교육제도 결정과정의 국민참여·교육제도·내용·방법·교재 등에 있어서의 다양화, 교육정책 원칙으로서의 다원주의 등의 도입을 의미한다.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학교교육의 통합은 1990년 9월 일반 초·중·고교육, 직업교육, 대학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추천사항들을 의결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교육제도의 점진적 통합으로 이행되었다. 그러나, 구동독지역에서의 정치교육은 시설과 교사능력면에서의 미비점으로 인해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에 힘입어 신연방주(동독지역)에서는 교육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우선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띤 교과목 및 직업교과목들에 대해 약 250만권의 교과서를 1990년, 1991학년도 초에 제공하였다. 같은 해 겨울학기의 경우에도 대학에만 1,500만 마르크 상당의 교재를 구비하도록 지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독지역 도서관과의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해 320만마르크 상당의 컴퓨터 시설을 갖추었다<sup>20</sup>. 신연방주에 있어서 변화된 학교체제에 맞는 교사양성을 위한 재교육은 통독 이후 구동독의 정치, 사회 교과목 교사들을 대상으로 2-3년간 과정으로 실시된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장경제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으로서 교사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필수적인 이수과정으로 되어 있다. 특히, 대학의 경우에는 학제변화보다도 교수진의 대폭적인 교체를 통한 개혁을 추진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로 이데올로기 관련학과와 연구소 그리고 종사자들을 명예퇴직 형식으로 퇴진시키는 불가피한 조치를 취하였다.

통일이후 정치교육은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서독지역주민에 대한 정치교육은 통일의 역사적 의의, 통일을 위한 서독주민의 비용부담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동독지역주민에 대한 정치교육은 동독의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고 새로운 통일독일의 정치, 경제체제에 대한 이

20) 오일환, "통일을 전후한 독일의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29집 2호, 1995, pp. 533-543.

해를 증진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동독지역주민들에 대한 정치교육은 민주주의정치에 대한 이해와 함께 특히 개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sup>21)</sup>. 이는 국가의 권위와 개인의 자율성간의 긴장관계를 인식시키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 V. 결 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독일에 있어서 정치교육은 민주적 정치문화의 기본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민주주의에서는 정치교육이 다원주의적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정치재단들은 독일연방회의 내의 민주적 정당들에 소속되어 있다. 예컨대, 앞에서 언급한 SPD에 속해 있는 Friedrich-Ebert재단, CDU에 속해 있는 Konrad Adenauer재단, CSU에 속해 있는 Hanns-Seidel재단, FDP에 소속된 Friedrich-Naumann재단 등이 있다. 이들 재단은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민주주의 의식의 함양과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확대시키는데 목표를 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닌다. 셋째, 통일이전 서독정치교육의 과제는 독일인들의 공동소속감을 상기시켜 주고 통일을 위한 정신적 유대를 공고화하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정치교육은 분단된 국가에 관한 학문적 대화를 권장함으로써 국가통일이 이루어질 경우에 상호간의 차이점들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통일이후의 정치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벽’을 제거하기 위해 분단으로 인한 정치와 역사에 대한 동서독의 의식격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서독주민에 대한 정치교육은 통합에 대한 이해와 서독주민의 물질적 희생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실시되는 반면에 동독주민에 대한 정치교육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시민으로 적응하기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정치교육은 주민통합을 위한 상호간의 이해와 내적 통일이 가능하도록 정신적 차이와 선입견을 제거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21) 통일원, 『독일통일백서』(통일원, 1994), p. 109.

통일이전의 서독은 동독에 대한 체제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체제개혁과 함께 민주적 법치국가원리와 사회적 시장경제원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치교육을 충실히 시행함으로써 통일의 내적기반을 다져 나갔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는 동질성회복을 위한 정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심리적 장벽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경험들은 통일을 향한 우리의 정치교육을 위해 바람직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 參 考 文 獻 >

- 김태길 외. 1988. 『한국사회와 시민의식』. 문음사.  
 황성모. 1990. 『통일독일 현장연구』. 도서출판 一念.  
 정용길. 1990. 『독일통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연합통신.  
 민족통일연구원. 1992. 『통일독일의 분야별 실태연구』.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원. 1994. 『독일통일백서』. 통일원.  
 한국정치학회. 1994. 『민주시민교육』. 한국정치학회연례학술대회 논문집.  
 민족통일연구원. 1995.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전경수·서병철. 1995. 『통일사회의 재편과정』. 서울대학교출판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95. 『독일경험의 적용: 통일대비교육의 새 모델과 정책대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독문]

- Hans-Helmuth Knüttler(Hg.). 1979. *Die realistische Wende in der Politischen Bildung*. München.  
 \_\_\_\_\_ . 1985. *Bibliographie zur Politischen Bildung*. Bonn.  
 Mickel, W./Zitzlaff, D.(Hrsg.). 1988. *Handbuch zur politischen Bildung*. Bonn.  
 Hans-Werner Kuhn/Peter Massing(Hg.). 1993. *Politische Bildung in Deutschland*. Opladen.

#### [영문]

- Nicholas Pronay & Keith Wilson (ed.). 1985. *The Political Re-Education of Germany &*

*Her Allies*. London: Croom Helm.

Robert Brownhill & Patricia Smart. 1989. *Political Education*. London: Routledge.

David M. Steiner. 1994. *Rethinking Democratic Education*.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eter Pulzer. 1995. *German Politics 1945-199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